물류차질 넘어 원부자재 수급마비 대체시장 발굴로 구조적 위기 극복

중동 전쟁, 장기화 국면

코트라 '중동 전쟁 긴급 대응 TF'
전쟁 초기, 물류차질 지원 요청 多
현재 장기·근본적 대응 과제 늘어
중동 수출 복구 목표 사업 추진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가운데)이 지난 4월 코트라 본사에서 개최된 18차 중동 전쟁 긴급대응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트라는 '중동 전쟁 긴급 대응 TF'와 중동 지역 13개 무역관을 24시간 연결해 기존의 비상 대응 체계를 이어가는 한편, 전쟁 피해 기업의 대체 시장 발굴 및 다변화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트라

중동 전쟁이 오는 6월 7일로 100일째를 맞이하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피해 양상이 초기 단기적 물류 차질을 넘어 원부자재 수급 마비, 대금 결제 지연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위기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동 전쟁 긴급 대응 TF(중동TF)'가 지난 3월 3일부터 5월 21일까지 애로상담 데스크에 접수된 734건의 상담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쟁 초기에는 물류 운송 경로 우회, 물류비 상승 등 현지 물류 차질에 대한 긴급 지원 요청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전쟁이 10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원부자재 수급난, 바이어 연락 두절 및 대금 지급 지연, 출장 차질, 계약 강제 변경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중동TF와 중동 지역 13개 무역관을 24시간 연결해 기존의 비상 대응 체계를 이어가는 한편, 전쟁 피해 기업의 대체 시장 발굴과 다변화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확대 운영한다.

코트라는 지금까지 현지 정보 전파와 애로상담, 물류비 긴급바우처 지원 등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해왔다면, 지난 18일부터는 기업들의 대체시장 진출 지원에 무게를 두고 '대체시장 발굴 및 다변화'를 목표로 지원 방안을 전환했다.

또 6월부터는 중동 비즈니스 복원, 대체시장으로 수출 다변화, 전후 복구 및 재건 참여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중동 바이어와 거래선 유지 복구를 목표로 '중동 수출 이어가기 온라인 통합사절단'을 6~7월 중 개최한다. 아울러 AI 수출비서 시범서비스를 활용한 대체시장 및 바이어 추천 등을 추진해 비대면 중동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동 전쟁 상황이 다소 소강상태에 있는 만큼, 기업 수요가 있는 사업은 시기와 지역을 조정해 추진한다. 일례로 두바이에서 2월 말 개최할 예정이던 K-뷰티 팝업 쇼케이스 사업은 유통망 바이어 요청으로 사업 시기를 4월로 연기해 한 달간 진행한 바 있다. 중동지역으로 파견 예정이던 무역사절단이나 걸프국에서 개최 예정이던 전시상담회도 온·오프라인 복합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지난해 미국발 관세 대응에 주력했다면, 올해 상반기는 중동 전쟁 대응에 총력을 다한 시기였다"며 "이제는 긴급지원을 넘어 대체시장 발굴과 수출 다변화, 인프라·프로젝트 등 전후 복구·재건 참여 등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K-푸드, 美·中·日 편중 벗고 신흥 3국으로 수출판로 개척

무협 'K-푸드 수출경쟁력' 보고서
지난 2024년 수출 90억 달러 돌파
온두라스·라트비아·케냐 공략 제시

K-푸드가 세계 무대에서 승승장구하며 한류 열풍을 선도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부 국가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출시장을 시급히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K-푸드 수출경쟁력 분석 및 시장 다변화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K-푸드 수출은 2015년 이후 연평균 5.8%씩 가파르게 성장하며 2024년 9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전체 수출액 중 美·中·日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50%를 상회해 특정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주력 시장 편중을 극복하고 K-푸드의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 '한류 수용도가 높은 국가'로의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온두라스(간식), 라트비아(소스), 케냐(쌀가공식품)를 3대 유망시장으로 제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남미의 온두라스는 청년 인구와 도시 거주자 비중이 늘며 소비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과자, 아이스크림 등 '간식류'가 유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의 관문인 라트비아는 식품 수입시장 개방도가 조사 대상국 중 1위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망이 확장세에 있어 바베큐 소스나 드레싱 등 '소스류' 진출이 유리하다. 아프리카의 케냐는 모바일 결제 및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세가 가파르고 중기 인구증가율 전망치가 가장 높아 떡볶이, 쌀과자 등 '쌀가공식품'이 유망 품목으로 추천됐다.

보고서는 3개국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기업들의 치밀한 전략을 주문했다. 온두라스는 단맛·대용량 제품과 대형마트 중심의 프로모션이 필요하고, 라트비아는 저자극·담백한 소스를 앞세워 유튜브와 구글을 연계한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 케냐는 틱톡과 왓츠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지역 단위의 맛 현지화가 필수다. 아울러 원료·영양 성분 표기법과 친환경 규정 등 현지 규제 준수도 공통 과제로 제시됐다.

김무현 무협 수석연구원은 "수출 판로 다변화는 앞으로 K-푸드의 경쟁력을 좌우할 열쇠"라며 "우리 기업은 신흥시장 진출 시 수반되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정부 또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규제 당국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는 등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재 취약 영세 사업장에 433억 투입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정부가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고위험 작업 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 일터 조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31일 작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의 3대(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 개선 비용을 최대 90%까지,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공단은 지난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총 4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과 품목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개 분야로,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 사업장을 신속히 결정해 지원한다. 지원자격과 구체 내용은 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
홍해 수출입 물류지원

요르단·사우디 지역 항만 추가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요르단 남쪽 바다 아카바만 및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바다 홍해을 통한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실시한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대응이다.

지난달 31일 공사에 따르면 아카바만의 아카바항과 홍해의 제다항, 킹압둘라항이 세계 1위 선사인 MSC 알바트로스의 기항지에 추가된다.

공사 관계자는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로 중동 지역 수출입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주와 포워더를 위해, 정기선 확보를 통한 물류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의 항만을 추가한다"며 "광양항의 중동 연계 서비스가 기존 머스크의 AE15 노선 1개에서 2개 서비스로 확대됐다"고 했다.

공사는 글로벌 선사 머스크 아시아 본부와의 전략적 협의를 통해 중동 노선(AE15) 선복의 확대를 추진했다. 특히 머스크는 기존 광양항에 투입하던 1만2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선박을 1만8000TEU급 선박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수출화물 처리 능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으로, 중동 지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에 실질적인 물류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실업급여·장려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고용부, 이달 자진신고·제보 받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부가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한 달간 전방위적인 기획 수사와 자진신고 유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법상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나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을 통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진신고 시 부정하게 탄 금액 자체는 전액 반환해야 하지만, 적발시 부과되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배상금)이 면제된다. 아울러 과거 부정수급 이력이 없거나 공모형 범죄가 아닌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고용안정 사업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해 준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원 비밀 보장을 통해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 제보는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보는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주요 부정수급 적발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를 타면서 사업주와 짜고 임금을 현금으로 숨겨 받거나,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고도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출석을 대리로 체크해 정부 지원금을 타내는 행위 역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자진신고 기간 중 전국 49개 지방관서에 배치된 고용보험수사관을 총동원해 강도 높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병행하고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자진신고하지 않고 버티다 수사관에게 적발되면 상황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부발전-세종시설公, 탄소중립 실현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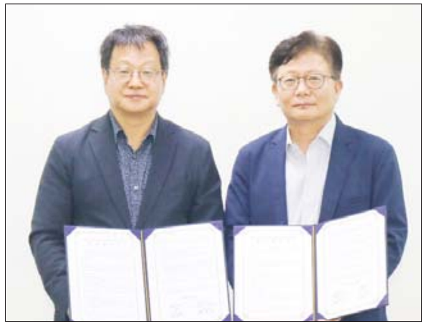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맞손'

한국중부발전이 세종시설공단과 손잡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힘을 보탠다.

중부발전은 지난 29일 세종시설공단과 '세종시설공단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종시설공단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게 목표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설비 구축을 넘어 각 기관의 핵심 역량을 결집해 최적의 시너지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재식 한국중부발전 재생에너지사업처장(오른쪽)이 조소연 세종시설공단 이사장과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부발전

무엇보다 이번 사업의 핵심 가치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있다. 중부발전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